

【2012.7.26(목) 강원일보】

## 올림픽특별법 시행령 막판 진통

26일 차관회의 안전서 빠져 심의 다음 달로 넘어가  
도 핵심 요구사항 포함 시간적 여유 확보 사력 다해야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 문제가 당초 예정된 26일 차관회의 안전에서 빠져 결국 심의가 다음 달로 넘어가게 됐다.

25일 도 정치권에 따르면 도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의 이견조율이 마무리가 안 돼 안전에서 빠졌다. 차관회의 검토가 연기된 것은 그만큼 도의 핵심 요구사항을 시행령에 추가할 시간적 여유를 얻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정부가 차질 없이도 핵심 요구사항 반영을 미루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쟁점은 개·폐회식장, 식수전용저수지 등 대회 핵심 관련시설 등에 대한 국비지원 여부다. 이는 당초 문화

부 안에 담겼던 것으로 기재부는 용역 결과가 나온 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천천히 반영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로선 개·폐회식장 등에 대한 확실한 국비지원이 없으면 대회 관련 핵심시설에 최소 3,000억원 이상을 투입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도 연간 가용재원은 2,500억원 수준으로 현실적으로 도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당초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 특별법은 동계올림픽 대회 관련 시설의 국비지원 대상, 지원 비율, 지원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라고 했지만 법취지와 점점 멀어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관련시설 및 올림픽특구 내 경관형성 정비 대상에 대한 각각 70%와 50% 이상의 국비지원, 올림픽 경기장 건설 시 지역기업 우대 등은 검토대상 자체가 아니라며 시행령에 명시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도와 도 정치권은 시행령에 국비지원 비율을 명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들며 '전폭적 지원'이라는 정부의 구두 약속에 희망을 걸고 있다. 지역기업 우대 조항도 장관 고시로 대체할 수 있다는 데 성과를 두고 있다.

도 정가 관계자는 "시행령이 언제 제정되는지보다는 어떻게 제정되는지가 중요하다"면서 "이번 차관회의 안전에서 빠진 배경에는 의혹이 있지만 내실있는 개정을 위한 시간을 만큼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민왕기자 wanki@